

제320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1월27일(수)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1
 -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환경부에 이어서 노동부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한 65.2%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 6000명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양적 완화 리스크 등 해외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여성의 경력 단절,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와 근로조건 격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고용률 7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총지출 기준으로 14조 479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13조 8732억 원보다 605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청년, 여성, 베이비부머 등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보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1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워크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청년·장년 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특화 직업훈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충 등 일·가정양립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실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중장년에 대해서는 정년 60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신설,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셋째, 수요자 및 현장과 연계된 직업능력 개발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기업 주도로 현장 훈련과 학습이 연계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술 등 고급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자 훈련의 성과도 높일 것입니다.

넷째, 산재사고 예방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험성 평가 등을 확대하여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보건시설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환경실태 전수조사도 면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알바신고센터 지원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을 위해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이 일자리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로자와 기업에게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경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 개요 등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전망은 자료로 같음을 하고, 4쪽의 예산안 총괄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지출은 14조 4790억 원입니다. 금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예산은 2조 451억 원으로 금년보다 2.4% 증가하였고, 5개 기금 사업은 금년 대비 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와 기금별 내역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의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그리고 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일, 또 수요자와 현장이 연계된 맞춤형 직업능력, 그 이외에 산재예방, 근로조건 보호, 노사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은 시간선택제 확산과 장시간 근로 개선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한도를 월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적합직종 발굴이나 직무재설계 등 컨설팅 지원을 17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워크 확산을 위해서 스마트워크센터 지원을 1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합니다. 5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 고용창출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시에 인건비 지원을 300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또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시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할 경우에 사업주 보전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직무훈련,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450개소에 대해서 58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업입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약 7000억 수준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 수준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의 경우에 대기업 지원 금액을 10만 원 정도 인하하였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60만 원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뱅크 3개 기관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그 인건비나 교육훈련비, 운영비에 대해서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또 지원한도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120만 원으로 늘렸고, 특히 산업단지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폴리텍 여성친화 캠퍼스 구축도 신규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분야별 전문가의 실무교육으로 청년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기업에도 인재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맞춤형 훈련과정을 대학 재학생에게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급방식 개편으로 70% 정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K-Move(해외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K-Move 스킴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해외기업 퇴직자나 기취업자 등으로 K-Move 멘토단을 금년에 100명 또 내년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민간 네트워크인 K-Move 센터 등도 10개소로 확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시행해 오던 해외 인턴사업 70억 원을 내년부터는 고용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역, 전시회, 플랜트, 관광인턴 등 6개 부처 9개 사업을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또 기업에 보급도 한 180개소

정도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년 연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또 고용연장 지원금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고요, 제도도 많이 개편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지원 한도를 840만 원 정도로 인상하고 임금 감액 비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소득 기준도 6800만 원 정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정년이 폐지되거나 연장되고 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신설해서 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년 취업인턴제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사회공헌 일자리는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수요를 반영해서 300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표준사업장의 경우에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서 일반 표준사업장은 30개소 정도로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축소 조정을 해서 14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은 480명에 대해서 110시간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5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더해서 훈련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수요 거점형 훈련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62억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8쪽,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 사업은 대폭 확대를 하였고요, 청·장년층 대상 패키지 II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 인원은 25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10인 미만 기업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임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1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돼서 고용부의 지원 인원은 자연감소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알코올이나 도박중독자, 노숙자 등을 위한 노동통합형 기업을 신규로 내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보조는 인건비 지원 비율을 연차별로 80, 60, 50%로 하향 조정을 할 예정이고 신규사

업으로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 지원해서 여기에 15억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중·장년 전직 지원, 건설인력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등 취약계층에 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급여는 약 한 3조 8600억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현장 중심,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취업을 전제로 기업 주도하에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일·학습 듀얼시스템 구축에 6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장훈련 지원이나 지원모델 확산 등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41개를 내년에 개발을 하고 또 286개 직무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그동안 기업이나 사업주 단체, 대학 등 168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특히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22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해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9쪽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을 위해서 전문기술 등 고급훈련 과정을 5만 명으로 확대를 하고 이 중에 일부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일·학습 듀얼시스템 사업으로 이관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주 훈련지원금은 3996억 원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한 120%로 인상을 하고 또 지역·산업 중심의 공동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2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행 제조업 중심으로 기간·전략산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일부 조정하고 산업 수요에 맞춰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직종을 추가하면서 총 지원 인원을 3만 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규실업자 훈련은 967억에서 721억으로 축소 조정을 하였고요, 전직실업자 훈련은 213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기관 인센티브를 신설해서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정규과정 이외에 여성특별과정

500명, 베이비부머 기술교육 1000명 등을 포함해서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대상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산재예방과 근로조건 보호 및 노사협력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14억 원을 편성해서 9925개소에 대해서 소요비용의 50~70%를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안전보건 지킴이, 화학사고 집중관리 또 위험성평가 등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도 432억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유해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3만 개소에 대한 보건관리 기술지도, 그리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15만 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197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그리고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에도 149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약 4조 가까운 수준입니다.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데 따라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은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입니다.

지방관서의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변호사 노무사와 민간전문가의 협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이외에도 서면근로계약 확산이나 최저임금 홍보, 아르바이트신고센터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 사업도 제도를 개편해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용자 대상자를 190만 원 이하로 늘리고 한도액도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 소액자금 용자종목도 신설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산기업 근로자 체당금 지원 또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도 금년 수요를 고려해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서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노사파트너십 지원 그리고 선진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개편을 해서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고자 7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홍보사업은 소폭 조정을 하고 임금직무혁신 연구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1쪽은 재정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중손실 완화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그리고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조정된 내용인데 앞서 사업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신규사업과 완료사업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내역이 신설된 것만 정리를 했고 기존사업에 포함된 것은 여기에 빠져 있고 별도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쪽 이하는 예산·기금별로 전체 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고용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보고 중에 현안보고가 뒤에 없나요? 당진 현대제철이 사고가 또 나서……

○은수미 위원 현대제철이 아니라 현대그린과 위……

○위원장 신계륜 잘못 보도됐습니까?

○김상민 위원 지분을 실제로 현대제철이……

○위원장 신계륜 현대제철이 대부분……

○이종훈 위원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가스 공급을 현대제철이 하기 때문에 다 책임입니다.

○김상민 위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계륜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중간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됐으면 준비된 대로 보고를 하시고 아니면 잠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보고……

○위원장 신계륜 지금 보고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 현대제철은요, 저희가 같이 가서 재해사고 재발에 대한 몇 번의 다짐과 공장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직접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고가 나면 중대한 경고를 할 것이라는 것을 여

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사고가 났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참 당혹스럽고 분노까지도 치미는데 일단 그 사고 개요하고, 정확한 개요하고 향후 긴급한 조치 사안들 또 장기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보고를……

○**은수미 위원** 지금 보고……

○**위원장 신계륜** 지금 보고하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산재 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생한 현대그린파워 LDG 누출 사고 동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자료는 없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자료 그러면 카피를 해서……

○**이종훈 위원** 정회하고 나중에 들읍시다. 그 자료도 줘 주고……

○**은수미 위원** 자료를 나눠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 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바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개편안이 현재 실행 단계에 있고 이러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동 사업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II유형 훈련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훈련 비용 일부를 참여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탁사업비가 과다하게 추계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부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및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은 훈련자 중 자부담 면제자의 비율이 80.7%를 차지함에 따라 훈련생의 책무성 강화라는 정책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자부담 훈련생과 자부담 면제 훈련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행 자부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시범사업에서 개설된 모든 과정이 사업주 훈련 등 기존의 훈련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2014년 본사업은 기존의 훈련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은 2014년도에 지원 대상을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4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능활용형 일자리사업과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서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중복 수행이 되지 않도록 동 사업의 특화성을 살려 세부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2년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100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선행검토가 부족하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노사정책사업 중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임금직무혁신 연구 및 조사 사업은 별도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고용노동행정 지원사업 중 고객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문제를 시정하고, 전화상담원에게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반영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스펙초월 및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NCS를 기초로 개발되어야 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 보완 개발 대상인 NCS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NCS 조기 개발의 명분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은 성과 측정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중점을 취업준비생에서 기업의 채용문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 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의 경우도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계획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1132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전반적으로 매년 집행률이 50%를 하회하고,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내역사업들의 경우에도 그 예측이 다소 과다한 면이 있어 계획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중·장년층 전직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과 목적 및 지원 대상, 소관 부서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데 2014년도 목표인원을 5030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계획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은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수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산재보험 적용 종사자를 기준으로 연간 예상 재해자 수를 정확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202억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에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되어 사업비가 상당 금액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은 192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인 수요거점형 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요거점형 훈련센터의 경우 기존 능력개발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실업대책계정은 2014년도에 여유자금 운용으로만 지출계획이 작성되었고, 향후에도 실업대책계정에서 신규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동 계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소액자금 융자 항목을 신설하고 있는데, 소액자금 융자는 융자금 사용목적에 제한하지 않아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액자금 융자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방법은 국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위원장 신계륜 다만 대체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오전시간이 12시까지이기 때문에 12시 이전에 질의를 꼭 해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양당 간사에게 말씀하셔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장하나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한명숙 위원 저도 요다음에 간단히, 자료 제출 문제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자료 제출 건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 모두 이전 국정감사 기간에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국정원과 노동부가 주고받은 문서에 대해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고, 또 장관님께서 공식적으로 이건 국정원의 지시나 요청이 아니었지만 장관님의 판단으로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그래서 심지어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장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정원 자료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다루었던 자료이고요. 무엇보다 대외비라든가 비밀문서로 다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은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라는 것을 사실 너무 허술하게 다뤘고,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사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참 모욕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노동부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그렇게 소중

히 다뤄서 이런 문서를 정말 아무 보안장치 없이 다뤘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걸 유출할까 봐 불자격이 없다 이런 답변도 말이 안 될뿐더러, 저는 일단 장관께서 절대 이 자료를 못 준다는 답변을 하셨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증거 미제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 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감법 15조인데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출석을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증감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안 주는 지청들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이게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답변이라고 보기 힘든, 너무 법과 원칙을 싸그리 무시한 발언을 들었기에 같이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싶은데, 혹시 잠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지금 진행할 본 대체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체토론 시간에 해 주시구요……

○장하나 위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월 1일 날 노동부에 전교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문서로 한 번도 저희들에게 답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했을 때는 ‘소송 중인 자료라 어렵다’ 이렇게 유선으로, 전화로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환노위 위원 6명의 연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11월 6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가처분결정 이후에 꼭 제출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가처분신청이 끝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두 번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가처분신청이 11월 13일 날 나왔는데 말을 바꿔서 지금은 아무런 답변이 없이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이라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떤 법

률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대서 '이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문서로 알려 주면 저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국회를 고용노동부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떠들어 봐라, 국회의원들. 상관없다' 이라고 뭉개는 겁니다. 이런 버릇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저는 국회의원 지금 10여 년 넘게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사흘 동안의 장차관의 공식·비공식 일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소송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에도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즉각 그다음 날 자료가 왔습니다. 공식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밤 9시에 왔습니다. 이건 무슨 버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뭐로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도, 저는 여야를 막론해서 고용노동부의 이런 자세는 우리가 고쳐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계륜 위원장님께, 고용노동부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정말 아주 따끔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안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자료 제출일을 지정해서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 6명이 연명을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깜깜무소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태도는 그 행정부를 보더라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지금 장하나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련법에 따라서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왜 안 오는지 고용노동부장관 말씀해 주시고, 한명숙 위원이 제출한 질문, 왜 자료가 안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국감에서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장하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국가정보원에서 공문을

통해서 요청받은 자료는 그 공문에 의하면 어쨌건 국가안보하고 보안에 관련된 수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받았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의 입장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종료에 관한 정보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증감법의 취지나 그 뜻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이 사회보장,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의 사업자하고 피보험자들의 아주 민감한, 구체적인 신원에 관련된 자료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공개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런 두 가지 양 측면에서 저는 장하나 위원님께 정부로서는 국정원의 공식 요청과 또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의한 요청 사이에서 상당히 여러 가치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님의 해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위원님이 해량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지금 장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대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된 자료는 사실은 큰 DB에서 그 항목에 따라서 가공된 자료입니다. 그중에는 원본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정원에서 요청한 자료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예시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아주 큰 고용보험 DB에서 그 시점에 맞게 정보를 추출한 것이고 또 국회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칠을 하고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때 광주청에

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저희도 칠을 하고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경과들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보험 피보험자들의 개인정보와 신분을 보호해야 될 책무도 있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하나 위원이 요청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적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위원장 신계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장하나 위원이 다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이 제안한 그 자료 제출은 왜 안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 자료는 정확하게 즉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의논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많이 기다리셨지요? 미안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현대그린파워에서 있었던 LDG 누출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부상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장관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난 화성의 삼성 불산 유출사고와 아주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

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삼성 화성 불산사고에서도 인명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난 것이 같은 장소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경고를 첫 번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이번 현대그린파워 역시도 사실상 현대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지요. 그래서 지금 1명이 사망을 하게 됐고 8명이 부상인데 1명은 지금 의식이 불명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스사고로 질식사고가 되기 전에, 이게 다 사실 인재인데 이 사고 당시에 가스경보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고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양모씨가 현장에서 쓰러졌고 사망을 했고 또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진입한 7명의 근로자들 역시 가스경보기를 다섯 명이 차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교육 부분들 또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서 강력한 징계가 부처 차원에서 필요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제철에서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실제적인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현대제철의 회사입니다.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저는 오늘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기업에서 임원 월급 삭감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또 그 안에 따른 의지와 결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임원의 월급을 깎고 또 삭감하는 문제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계속 제기했었던 어떤 부정 또는 불법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의 초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좋은, 효과적인 효율이 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을

주기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태가 보여주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 평가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공기업들의 평가기준이 경영효율평가로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경제적 가치의 부분들이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어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국정과제의 되게 중요한 기초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장애인공단 같은 이런 데에서는 투입 대비 아웃풋이 좀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정이 투입이 돼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평가의 기준으로 간다면 숫자 만들기 식의 예산 투입 그리고 숫자 올리기 식의 경영성과의 방향으로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모든 어떠한 예산안들이 그저 숫자 올리기 식……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제기를 했지만 청년 중소기업 인턴제 같은 것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200억이 넘는 것이 나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떨어져서 다 3개월 미만의 그런 형식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107%, 100% 이상의 청년고용 올렸다고 하는데 거의 허수에 가깝고,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청년 고용의 창출은 굉장히 심각한데,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데 공기업에서 또는 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몇 % 달성했다’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경영 효율의 평가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돼서 공기업과 이것들이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단협 문제, 저희 의원실에서 집중적으로 공기업의 여러 가지 카드 부정사용의 문제들, 단협의 문제들 또 경영에 대한 평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 앞장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보여주기 식, 숫자 식으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부처와 또 공기업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대제철부터 시작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자료를 가지고 담당 국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현대제철 사고가 반복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들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정부 부처는 국민들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고,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뵈 면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현대제철 부지 내 모든 현장, 지금 사고가 난 현대그린과워, 방금 한 달 전에 제3고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독이 빠져 있어서 일부러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치에서 현대그린과워가 이런 가스질식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부지 내 모든 현장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포함한 아주 강도 높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이 사업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동안에 천안지청에서 특별지시를 해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밀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범부처의 공통된 방향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면서도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공단이나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도 있습니

다. 그런 가치들이 너무 훼손되거나 또 그동안에 공단, 공기업이 맡은 사업이나 이런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해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저하 문제도 동시에 고려를 하되 경영의 책임을 맡은 경영진 그리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의 효율성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에 있어서의 비용절감 부분들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민 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한 말씀만……

지금 특히 환경노동 부문에 있어서 국민과 굉장히 중대하고 밀접한 현장에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 부처에서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의 처우 조건은 많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조금 약한 편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핵심의 본질은 경영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을 잘 찾는 것을 가져가고 거기서 부정과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지 그것이 임원의 월급을 삼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의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또 조여지는 형태가 되면 더 부실하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공단 같은 이런 식의 개념은, 이 공기업 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실제 본질보다는 숫자 맞추고 효율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조정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말씀 중에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그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운위의 일반적 평가기준에 우리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평가기준을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단과 공기업이 맡은 바 소명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 간에도 형평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임금이나 보상을 과다하게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상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朱永順 委員** 방금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이 현대제철 관련 이야기를 하셨고 장관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환노위에서 옥죄면 안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가 서울시내에 가다 다른 사람을 하나 치어 가지고 사망사고를 냈는데 현대자동차 차 만든 회사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현대제철이 지분 29%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회사가 29%를, 이번에 사고 낸 회사 그린과위가 2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42%는 산업은행이 주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내서, 방금 이 자료를 하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보도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왔는데 보도자료가 이것은 허위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고 그린과위에서 보도자료를 아까 낸 것이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11월 26일 오후 6시 20분 충남 당진군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과위 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1명 사망, 부상자 8명이 됐다’

현대그린과위주식회사는 산업은행 등 재무투자자 42%, 현대제철 29%, 중부발전 29% 합작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2007년 4월 2일 설립되었으며, 제철공장에서 발생한 부탄가스를 현대제철로부터 구입해서 800kW의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독자회사입니다. 현대제철로부터 가스를 구입해다가 전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회사를 가스를 팔았다고 해 갖고 현대제철 니 책임이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단 현대제철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마 공장이 현대제철 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고는 현대제철하고는 무관한 사고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신계륜**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대제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우선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정책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적으로도 보면 사실 일자리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예산이 약 4.6%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 예산, 고용노동부 예산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그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전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결산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어떤 국감이나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저는 이런 식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102억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얼마나 부실한가 이것은 지난번 국감이나 결산 과정에서 다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취업을 시키는데 무슨

피지 같은 데 가서는 20불 받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또 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계 항공회사들이 산업인력공단 강당에 가서 면접한 것을 그런 숫자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숫자 채우기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의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것은 숫자 채우기로 사람 수, 취업 목표 수만 늘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5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국회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랑곳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숫자를 한 2만 명 늘려서 25만 명하겠다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도 이것의 어떤 부실관리라든지 부정수급의 문제를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없이 이것도 숫자만 늘리고 예산을 또 549억이나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많은 일자리사업들이 복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수급자들한테 다 가면 그냥 복지 차원으로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런 브로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하겠다, 좋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을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시간제 일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

리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에서 아주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이런 것과 병행이 되지 않을 때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목표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도 보면 올해, 지금 내년도 목표를 보면 한 5000명 정도 됩니까, 지원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영표 위원 그렇지요? 나는 5000명을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대기업들이 CJ 같은 데 음식료 업체 이런 데가 많아서 거기는 당연히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머릿수 채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물론 당시 아직 선정만 했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정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대책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고용률 70%다 이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다 떨어뜨려요. 기재부하고 청와대에서 떨어뜨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거 주워진 목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 제가 이 법안을 내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우리가 2016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56년생, 57년생 딱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감도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저희가 주문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도 하고 예산도 좀 증액을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 56년생이나 57년생, 특히 정년을 앞둔 이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도 사실 80억밖에 늘지 않았습다.

사실 이 제도는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

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성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이게 지금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적 또 염려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적하신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일단 지적하신 몇 가지 언급하신 사업들은 사실은 위에서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요, 고용률 70% 로드맵에 고용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새로운 사업에 담았습니다.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과거에는 밀어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질 낮은 일자리에 가서 아무 데나 네가 알아서 그냥 해외에서 취업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수요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사실 해외직업탐방단도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으신데 사실은 탐방단들이 하는 게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될 일자리 현장의 사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사람 어떤 직종에서, 어떤 나라에서 가능한 일자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샌더의 입장,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준비 없이 가지 않도록 수요

처에서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K-Move 멘토스쿨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사회인들이 우리 청년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간 이 사업이 숫자적으로는 초기에 많은 숫자는 안 나올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취업, 그다음에 그 친구가 취업한 다음에 다음 후배들이 왔을 때도 그 자리에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성패 관련해서는 25만 명을 잡아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역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여러 계층이 있는 가운데 조기퇴직으로 나온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몇 개 안 되는 아주 성과가 오버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늘린 것은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제2의 근로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취성패Ⅱ 사업들의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부실이나 부정수급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안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취성패Ⅰ도Ⅰ이지만Ⅱ을 어떻게 하면 부정 없이 또 누수 없이 전달할 것인가 이 전달체계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인 전달체계를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숫자적인 목표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새로운 고용패턴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열어간다는 마음으로 질 중심으로 추진을 하되, 물론 그 가운데서는 기존의 약간 풀어야 될 차별이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근로감독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의 틀들을 이용해서 면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답변할 때 조금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우즈벡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K-Move, 우리보다 임금이 낮은 나라에 가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 제가 거기 교육관을 만났는데요. 한글교육을 엄청 늘리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 데려와서 교사 시키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 봉급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후진 개도국 이쪽에는 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선진국에는 일자리가 없을 거고, 굉장히 참 K-Move에 대해 걱정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현지에서 투자자, 사업을 투자하는 분을 만났는데 앞으로 외국에 신규투자 하는 이런 한국 사람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방안, 또 우리 청년 중에 현지에 가서 ‘후진국이지만 내가 가서 살겠다. 가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한다면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반영에 참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대정부질문 한 내용 장관님 못 들으셨지요? 제가 외교통일 분야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그중에 남북통일을 위해 가지고 노동 관련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 K-Move도 어찌면 우리 예산 들이고 할 것 같으면 북한에 보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결국은 남북 경제수준을 같이 가는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적이다.

두 번째, 고용허가제를 북한 근로자를 데리고 온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거다, 개성공단 지금 20만 원 봉급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 북한 주민을 데리고 오면 200만 원,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아갈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것은 아마 국가 안보나 다른 보안, 또 실제로 북한 주민이 와서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관련된 사항,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총리님한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 그렇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어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면 총리실 주재로 해서 아마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련 몇 가지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서면 질의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 한국노총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자, 노동조합이 돈을 내고 국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면 근로자 자주복지사업으로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인데 아직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는데, 저는 근로자 자주복지가 조금 정부가 거들어 준다면 좋은 복지사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용을 아마 해당 국에서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재의료사업 재정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하지요? 심각한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날 경우 기금, 예산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만성적인……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장관님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구노력에 더불어서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는 한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우리 산재근로자 진료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의료보험 수가보다도 낮은 진료수가로 산재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일반회계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도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복수노조 시대의 정부의 노동조합 지원이 다양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의 특정 노조의 관행대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복수노조가 상급단체도 늘어나고 신생 노조도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 상급단체도 지원을 좀 늘려 줘야 되겠다, 이런 질의입

니다.

중앙노동단체로 말하면 예를 들면 국민노총 같은 데도 늘려서 자생적인 노조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지원은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 데 조금 지원을 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의 훈련비, 표준훈련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IMF 때 훈련비가 늘어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25%나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2%, 2% 해서 IMF 이전까지도 턱도 없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은 여전히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 측면에서 이 표준훈련비를 노동부에서 인상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우리 기능올림픽의 수상자들에 대한 지원 차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기능올림픽 수상자들, 비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매우 차이가 크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구두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자주근로복지사업 관련해서는 공감을 먼저 하고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추진 시에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수노조 시대의 노동단체들의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비 단가 관련해서도 저희들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현실화할 것인지는 이것은 그 훈련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하

신 대로 현실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장애인·비장애인 기능올림픽 관련 해서 처우,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나 빠진 것, 산재의료사업 재정 지원은 빠졌는데 그것은 일반회계가 어려우시면 산재기금으로라도 그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수지보전 방안을 적극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협 위원 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정협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 있었지요?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시간제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보좌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이 다녀왔는데 10대 대기업 82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 사람은 참 많이 왔더라, 보좌진이 몇 군데 채용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혹시나 했던 생각이 역시나이고요, 우려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개 회사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전자입니다. 최고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칭송하는 삼성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2년 한시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삼성전자 판매 여기도 역시 2년 한시 계약직입니다.

다음, LG 콜센터 상담직 25시간, 월 고정 52만원, 시급 52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할 사람한테 4대보험 해 주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라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 사무보조, 연구소 시험보조, 1년 계약직입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정규직의 한 4분의 3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정규직화 계획은 없습니다.

GS SHOP, 홈쇼핑 텔레마케터 20명, 부산 근무 가능자만 모집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 모집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응시할 사람이 없겠지요, 부산으로 이사 갈 생각 하지 않으먼?

GS리테일, 매장 상품진열 판매원입니다. 시급

5800~6000원, 점포 사정에 따라 8시간도 가능합니다. 원래 여기는 전일제 일자리로 채용을 하고 싶었는데 하도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해가지고 시간제 일자리에 내놨습니다.

GS Mbiz, 차량 딜러, 영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명, 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적 평가해서 이후에 전환 여부는 판단하겠다는, 활동비는 80만원, 월급도 없습니다. 성과급 체계, 식대 11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진입니다. 협력업체 간접고용, 컨테이너 원격 제어하는 일인데 여기는 직접고용, 부산에서 근무하는 자리이고 시급 5200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원래 전일제 일자리로 채용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제 일자리 계속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놨다고 얘기합니다.

갤러리아, 계산직, 식품판매직인데 시급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얼마를 모집할지도 아직 잘 모르고요.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게 내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사에 20명 예정인데 4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세부계획 없고 ‘내년 1월 중이나 한번 모집을 해 볼까요’ 이런 정도의……

보험공단, 전문직 시간제 일자리 20여 명, 시간도 없고 급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 세부계획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내년 1월 달쯤에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리고.

산업인력공단, ‘향후에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들어와서 살펴보세요’, 내년 1월 중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던 82개 업체들 채용조건—임금, 근로시간, 계약형태—사전에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겨우 구두로 몇 개 들었는데요. 주로 6개월에서 한시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이고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아니고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도 아닙니다. 상용화 계획도 없는 시간제 일자리이고요. 임금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밝혀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채용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습니. 정말로 속빈 강정 시간제 일자리 쇼입니다.

우려했던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다…… 비정규직 정도가 아니라 시간제 알바를 양산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박람회 소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박람회 다섯 번 하겠다고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몇 개나 됐는지 혹시 장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획, 어느 직무에 몇 명을 언제 채용하겠다는 것은 계획에 근거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협 위원 전혀 파악도 안 되어 있고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없습니다. 정규직도 없고요, 채용 인원 몇 명쯤인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알바성, 알바성 정말 나쁜 일자리 여기에 지금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더니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 다섯 차례 잡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하고자 했던 것, 인건비 지원하는 것, 무기계약직을 전제로 해서, 정규직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슬그머니 지금 현재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 왜 바꾸었습니까? 계약직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재정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일자리가, 이게 알바 양산하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방식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이 됩니까? 이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국회에서 몇 차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확대재생산.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사업이라고 분명히 지적했고요, 비정규직 양산하는 방식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답변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채용 계획들을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서 참여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다시금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채용박람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 주고 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새로 시간선택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여 주는 정보

제공의 기능도 크다고 봅니다. 물론 어제 현장에서 약 3500명 정도 현장 면접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실제 채용은 내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들은 이미 정부에서도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세 가지에 부합해야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건 알바시간제 일자리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런 비슷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의 시간제 일자리들이 정말 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 국민의 수요와 기업의 수요가 맞춰져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미진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노동부가 얘기하는 상용형이라는 개념이 1년 계약직 이것을 갖다가 상용형으로 이렇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상용..... 1년 이상, 무기계약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 인건비 지원 227억, 사회보험료 지원 101억, 예산 이렇게 해서 내셔야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계산은 저희들이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심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산 이것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합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주당 김경협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어제 사실상 시간선택제 박람회장을 장시간, 한 2시간 가까이 스테이하면서 부스도 개별적으로 많이 둘러봤어요. 그런데 역시 한시계약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최저임금 수준, 조금 전에 김경협 위원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임금이 100만 원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업의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와 4대 사회보험의 차별 없는 이런 시간선택제, 그동안 정부가 워낙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어제 부스에 가서 본 위원도, 대한민국 굴지의 10대 대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한 데도 보면 거의가 100만 원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나마나,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응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은 4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엄청난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물론 그래서 어제 박람회도 ‘양질의’ 자는 뺏더구먼요, 그렇지요? ‘양질의’ 자는 뺏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부러 뺏 것은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일부러 뺏 것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성태 위원** 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뺏 것 같았는데……

또 아울러서 행사를 너무 서둘렀어요. 기업들한테 닭달만 하고 채근만 해 가지고 그냥 부스 차리고 사람, 시간선택제 뽑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만 그냥 채우는 형식의……

보면 채용 시기가 다 달라요. 기업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뽑는 그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준비한 그런 행태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내지 2월, 2월도 불확실한 그런 기업들도 많았어요. 이러면 괜히 해 놓고도 나중에 후폭풍이 더 크게 불어 닥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처음 실시한 시간선택제 박람회이니만큼 준비에 많은 차질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많이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풀타임 장시간 위주의 고용 관행으로서 시간제 일자리가 매우 적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박람회장에서 확인한 것은, 정말 노동자 자발적 수요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어요. 이것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또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이 늘 지적합니다마는 여차 잘못하면 파트타임, 시간제,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비정규 일자리 확산으로만 귀결되어 버리면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도도 전체 고용 중 시간제 비율이 10.3%밖에 되지 않으니깐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확산시키고 또 자리를 잡는 데에는 마중물 차원에서 제도활용 기업의 저변이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루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라는 점이나 또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이 좀 확대되어서 보다 많은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과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금에 있어서는 지방하고 또 서울의 차이가 많고 또 실제 우리 기업들, 지방의 중소기업들 임금을 파악해 보면 서울에 있는 제대로 된 중소기업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수들인데 저희들이 경직되게 지원요건을 가지고 가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정한 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대기업에만 결과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그러한 것도……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위원** 좀 보완을 많이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유연하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300만 낀세대 보호를 위해 정년 연장을 조기에

안착하는 선도적 기업을 고용노동부가 육성하고 장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지요,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2016년도부터 정년 연장이 됩니까마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는 거둬 제가 강조합니까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일자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장년층 고용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적 의지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강도 높은 의지를 가져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단 몇 개월 생일 차이 때문에 길게는 5년에서 6년까지 정년이 달라지는 이런 상대적 위화감과 박탈감 이것을 호소하는 낡은세대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정책위에도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인원을 기존 1820명에서 6820명으로 5000명 증원해서 추계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정년 연장을 조기 도입해서 안착시키도록 하는 그런 취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낡은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홍영표 위원이 뭐 할 때는 80억이 아니고 한 198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180억 정도입니다, 임금피크제만은. 그리고 고용연장지원금은 80억이 증액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태 위원** 하여튼 정년 연장 조기 도입과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이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 연계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낡은세대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에 투자들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좀 정리를 해서 고용연장지원금 같은 경우 정년폐지·연장 또는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법 시행은 얼

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낡은세대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정부 발주 공사 입찰 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종훈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저는 현대제철 및 현대그린파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부 대책 붙임1에 보시면 뭐라고 저에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현대그린파워의 발전시설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현대제철과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 하시려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하십시오. 세 가지 점에서 유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답변 하지 마시기 바라구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금감원 현대제철 분기보고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분기보고서를 보면 ‘현대제철이 지분을 투자, 29%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참여한다’, 그래서 분기보고서에 제출을 해 냈어요. 이게 어떻게 그린파워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요.

거기다가 그린파워가 만들어진 이유가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에서 건설 추진하면서 부생가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 활용해서 발전사업 하려고, 한마디로 썩 먹고 알 먹으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중부발전하고 현대제철이 각각 29%씩 지분 가지고 있지만 중부발전은 경영기술자문만 하고 현대제철은 직접 경영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장소까지 당진,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하시고 이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서부터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저는 지금 대책, 좋습니다. 전담감독관 배치하고 강도 높은 정밀 안전점검 그러니까 현대그린 파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것이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 문제는 전혀 해결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땀땀 식 대책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안심사회 공약을 지금 고용부장관께서 혹은 고용부가 파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터이니 그 이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재 330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9월 1일자로 산업안전감독관이 35명 그다음에 일반 감독관 6명 그래서 총 41명 TO만 증원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증원이 돼요, 내년에. 현재까지는 330명 정도를 가지고 190만 사업장 정도를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1인당 약 5800개 정도 산재감독관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 그래서 1인당 1년에 10곳 정도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듣기를 이게 공무원 증원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노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박근혜정부는 그리고 고용부는 이렇게 공무원 증원에 대한 기재부나 혹은 안행부의 반대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안심사회 공약을 하셨습니다?

330명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증원을 해 봤자 이게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다가, 거기다 제가 봤습니다. 지금 산업안전감독관 교육예산이 6920만 원이지요? 내년에 늘어날 것인데 똑같아요, 올해나 내년이나.

그러면 늘어나는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포기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거기다가 지금 산업안전감독관 전체까지를 포함한 전체 근로감독관이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게 정원이 약 1689명이고 현원이 1434명, 즉 증원을 84.9%, 매번 한 85% 증원율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리고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이 너무 힘들어서 기피를 하노라 그러면 적어도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근로감독활동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얼마를 계산하셨느냐면

그러니까 현재 현원 을 85.7% 곱하기 1인당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놓으시면 결국 근로감독활동지원금을 보면 이것 증원 안 하고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전담 감독관 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로감독관 이렇게 부족하고 그 안에 또 산업안전감독관은 더 부족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에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서 여기는 어떻게 구멍 메우고 그러면 다른 데 또 나면 여기 이동시켜서 땀땀 합니까? 지금 이것은 명확한 공약 파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예산이 뭐가 문제냐면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문제는 계속 문제가 돼 오고 있는데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으로 내년 2억 9700만 원 정도를 배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년 대비 17.7%나 감소한 겁니다. 아예 교육 및 전문성 제고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안도 보십시오.

현재 2014년에 431억 8400만 원, 이게 전년 대비 11억 9700만 원은 증가를 시켰지만요, 뭘 감소를 시켰냐면 그 내용 구성을 보면 이번 사고처럼 기초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사고성 재해예방액은 오히려 26억 9400만 원 감액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산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심사회 하겠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이번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요. 그중에 4명이 하청업체고요. 4명 중 1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그 가스경보기도 착용을 안 해서.

그러니까 위험을 외주한 문제가 여기서도 드러난데다가 거기다가 그중의 4명은 하청업체고요. 2명은 시공사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9명 사상자 중에 6명이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비정규직이에요. 죽음에도 순서가 있습니까? 왜 하청과 비정규직만 먼저 이렇게 당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 작업 아웃소싱 금지에 대해서 고용부의 의지를 계속 묻고 있는데 별다른 계획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국회에서 기업 살인법 제정해 보겠노라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산재로 죽는 사람이, 산재공화국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한국이 1위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의지조차도 없다면 이것은 박근혜 공약 파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 상당히 저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이지만 산안감독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전체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아마 세입이라든지 세출 구조조정 중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산업안전감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안전공단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민간기관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면 제한된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 예방과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인 개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준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부분에는 3억 6200만 원이 2억 9700만 원으로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 노사협력정책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과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처럼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원을 관련해서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85%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0%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상의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근로감독관 인적역량을 더 강화해서 기초적인 안전사고 등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박종길 산업안전국장 발언대로 좀 와 주세요.

어젯밤에 제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 있는 현대그린파원에서 가스중독 산재사건 소식을 듣고 정말 참담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번 국정감사 때 현대제철 산재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지적한 문제점이 또 반복이 돼서 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참담했고.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실망, 절망한 것이 제가 아까 자료를 보자고 그래서 왔는데, 이것은 동향보고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종훈 위원** 잠깐, 잠깐. 그리고 보면 의법처리, 특별감독, 밀착관리, 만날 하는 얘기인데 또 사고가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 종합감사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했어요, 엄격한 게 다가 아니라 왜 사고가 나는지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 사업장 가서 생산 시스템 전체를 놓고.

제가 이것부터 먼저 여쭙 볼게요.

LDG가스, 저리로 해서 나오는 가스가 역류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왜 역류했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일단 자료부터……

○**이종훈 위원** 아니, 아니요. 왜 역류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아침에 다 읽어봤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그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오후에 보고드리려고요. 그 부분은 그냥 동향 차원에서 드렸던 것이고 오후에 점심 마치고 나서……

○**이종훈 위원** 제가 보기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띄워 주세요.

현대그린파위는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폐가스, LDG하고 BFG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는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스팀 같은 것 가지고 현대제철에 난방 공급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것을 왜 해요? 그 폐가스 가지고 에너지 해서 돈 벌고, 펄 먹고 알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사람이 죽는 가스잖아요. 그 폐가스를 그냥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 현대 그린파워가, 2010년에 현대제철소가 정상 가동하기 전에 이미 이 회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정상 가동하면 바로 발전을 해서 폐가스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말 아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LDG는 저리로 해서 오는 거고 BFG도 오는데 둘이 합쳐서 버너, 저게 발전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이프(safe)한, 인체에 무해한 완전 연소된 가스가 대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화살표가 안 돼 있는데 버너에서 대기로 나가는 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LDG가스가 다른 배관을 통해서 역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이패스가 있다는 겁니다. 바이패스가 있다는 것은 바이패스를 통해서 그 나쁜 가스가 대기로 바로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안 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훈 위원** 따라서 이것은 혼자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부랑 같이 하셔야 되고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것이 바이패스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종합감사 시 국장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국정감사 할 때 제가 현대제철 증인한테 뭐라고 그랬지요? 공기 단축하려고 동시 작업해서 그렇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종훈 위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현대제철, 그것을 가지고 버너 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현대 그린파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종훈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건설 관련은 대우건설, 거기서 하청받은 근로자는 대광이엔씨, 이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소통이 없으면 이런 문제 또 발생하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기억 못 하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기 단축이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 자료 어디에도 그런 말 없고 '몇 명 죽었다, 앞으로 잘 감독하겠다', 엄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자료를 보완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동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어이없는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전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저 빨간 장소가 사고 장소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로, 바이패스관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바이패스관이 있더라도 거기의 모든 밸브를 막아서 거기는 아무런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종훈 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잠겨 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LDG가스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결국 바이패스관을 통해서 역류했는데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왜 여냐고요?

4개 업체 간에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났다고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산 시스템 전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첫 번째, 2010년에도 LPG가스 누출로 1명 사망했는데 저때는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잘

안 보여 가지고……

○**이종훈 위원** 어제 사고가 터졌으면, 그전에 동일한 사고가 터졌을 때 무엇 때문에 사고가 터졌는지 노동부는……

그것도 몰라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어디, 이 공장에서?

○**이종훈 위원** 저 당진 공장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사고가 2010년에도 있었던 말입니다. 저도 몰라요, 이것하고 똑같은 건지 어떤 건지.

저때 저것 제대로 파악해서 바이패스관이 있다, 바이패스관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번에 이런 사고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건 터지면 가서 특별감독하고 그게 다 아니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국정감사 때 제가, 이 국회의원이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오늘 30분 자료 보고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끝내줬는데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그린과워, 현대제철 현장에 있는 LDG 누출사고 문제는 저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동향보고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분노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종훈 위원님 혼자서 파악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제가 볼 때 사실을 굉장히 호도하거나 아니면 현대제철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생각이 앞서 가지고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상임위하는 데 제출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거는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대제철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된 게 며칠 됐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아까 그냥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은 행사가 있어서 가신다고 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위원장대리 홍영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새누리당 간사가 동의를 했다고 그래서 동의는 했는데요.

예산에 대한 상임위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산업인력공단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국회 경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들도 사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도 상임위 놔두고 또 국회 의사일정 놔두고 그러지는 않는데 다른 기관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이라는 것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되고 소위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질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듣고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교조 문제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장관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날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통보처분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14년 동안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조합원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점,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으로 인해서 법정분쟁이 확산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국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는데, 국민 보통의 눈높이이자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도를 넘는 역사의 후퇴를 어디까지 계속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법원이 명백히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상식에 어긋나고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부장관께서 국민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전교조를 억압했지만 교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동부의 예산에서 지난번 추경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참으로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조사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맞추어서 숫자를 꿰맞춘 듯한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문제와 유사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지원에 대한 것을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와 철저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맞게 이것을 잘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시범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걸러내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마땅히 추진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결국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통령표 문지마 예산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수요조사나 또는 기업이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외부에 있는 직장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이 여성취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취업을 위한다면 그 여성취업을 위한 부대시설은 무엇이 필요한지, 수유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어린이 육아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그냥 무리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요조사나 계획이나 또는 시범사업, 이런 과정을 거칠 생각이 없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우려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2009년하고 13년에 사실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근본 목적이 주로 우리 여성들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서 육아도 하고 또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도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의 공공 부분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이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유연근무제랄지 다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한 문장 정도 끼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뭉술로 넘어가면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고용창출, 고용 70%를 공약하셨는데 그 공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그 외에 기업이 어느 정도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야지 선택제 일자리제도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봤지만 저것은 알바입니다, 알바.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하고자 하는 박근혜 표 선택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것이 뭔가 다른 정부하고 특징을 지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한 조사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좋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확실하게 아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센터 내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지금도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프라를 포함해서 실제로 스마트워크센터가 하드웨어만 있고 이용률이라든지 편의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스마트워크센터는 사실은 주거밀집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도심으로 들어오기 전에 외곽에서 편리하게 와서 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조사들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좀 더 면밀하고 계획이 있으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다투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현대제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현대그린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9% 주식을 갖고 있고, 현대제철이 25% 주식을 갖고 있고, 42%는 산업은행에서 주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부생가스를 구입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독자적인 발전회사입니다.

현대제철은 연료공급 계약에 의해서 현대그린파워에 발전연료인 부생가스 공급을 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의 건설·운영·유지·보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전에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자를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고 계속 그런다고 하면 어느 대기업도 안 걸려 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잠깐 보니까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연료 공급 및 전기공급 계약을 현대그린파워하고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료 공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중부발전은 발전소 설계, 재원 조달, 건설시험 또 시운전 및 정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자문용역 제공 일체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난 직원들도 보니까 그린파워 직원이 3명, 대우건설 직원이 2명…… 대우그린파워에서 대우건설이 공사를 도급받아 가지고 대광이앤씨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는데 거기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업이 사업장이 넓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직접 여러 가지 연료 운송 문제라든지 또 일부 투자를 하고 있지, 법적으로 이것은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또 공급계약이 전부 체결돼

있고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물론 현대제철이 전혀 책임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왜? 대기업이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모든 안전조치는 함께 공동책임을 느껴야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은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모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 ‘현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이걸 현대가 책임지라고 한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 보니까 직원이 28명 중에서 현대제철에서 퇴직한 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 주요 보직자 28명은 전부 중부발전에서 나온 직원들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무조건 대기업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기업이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으로 이런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러십시오.

정확히 그 내용을 장관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파악된 결과는 출자는 했지만 법인은 독립법인이라서 아마 법적인 책임 소재 부분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것은 어차피 현대제철이라는 당진, 일종의 큰 산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단 쪽에서 나는, 관련된 산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관계나 책임 소재 이런 것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일단 현대그린파워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연료 공급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린파워가 하는 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인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났다는데, LDG 가스에 의한 질식이 2010년에 현대제철에 또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파워에서도 직접적인 것이 같은 가스라서 어떻게 이렇게 현대제철하고 그린파워 간에 연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시간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금년에 118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내년에는 292억 원으로 약 배 이상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지금 근로자가 2200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2300~2400명 수준이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0명으로 대폭 숫자를 늘렸습니다.

장관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정년 60세법 시행 이전에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5000명 정도 이걸 할 수 있을는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실제로 임금피크제 제도가 도입이 필요한 곳은 사실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건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의 양보가 필요하다, 양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쨌건 이것이 노사가 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노동조합에 어떤 기피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컨설팅 부분이구요.

긴세대 관련해서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16년, 17년에 가기 위해서는 긴세대에 대해 특별한, 한 3년 동안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고용 안정, 정년 연장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 의사진행발언 때 장관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녹취를 해서 보았는데요, ‘국가안보 보안에 관한 수사자료 요청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고, 그 후에 수사 내용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자료를 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 제가 이런 자료를 언론과 심지어 그 사찰 대상이 됐던 당사자에게 알렸던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다는 범조인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왔던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런 사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에 놓이지 않기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립니다.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다면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저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 점은 한번 더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원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계속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DB에서 가공된 자료인데 원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은 표현의 착오였다고 보여지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원본이 사라질 수는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원자료를 말씀드린, 그게 DB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그런데 고용보험 원자료가 사라지는 않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주 바뀝니다, 시점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시점마다 달라져서 과거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똑같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들이 바뀌니까요.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지운 자료를 보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해야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피보험자……

○**장하나 위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저도 과거 가입정보부터 누적해서 봐 왔기 때문에 과거 자료가 없어진다는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없어지지 않고,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그 구성원이 바뀐다는 겁니다.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를 별로, 벗어나는 답변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평택지청을 직접 방문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녹취자료를 잠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 청취)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제가 참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한다고 해서 사안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장관님.

저러한 지청에서의 담당자의 답변을 장관님도 처음 보셨겠지만 첫째로 공문이 사라졌다, 암호

화 파일이 어떻게, 원본문서도 없어지고 첨부파일도 없어지고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어쨌든 실종됐다는 건데요. 저런 답변을 듣고 제가 다 수궁을 하고 '아, 저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없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저런 답변을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공문이 보관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사실이라 해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둘째, 아까 보셨다시피 평택 쪽에서, 저희의 의혹은 그렇습니다. 평택지청 소관인 누구나 평택이라고만 해도 알 만한 이런 사업장의 조합 간부들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사찰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제조업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무슨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었던 29개 업체의 건설 일용근로자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의문이 더 들지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당하고 있느냐 이것 역시도 광주·전남 지역의 대안학교 전체 직원처럼 일단 국정원에서 다 개인정보를 쭉시고 보자 이런 거냐, 아니면 둘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평택지역의 제조업체 직원에 대한 사찰이었느냐 이런 점도 저는 국회에서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 위원님 또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님께 이 건을 이렇게 묵과해서는 안 된다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장관님이나 관련자의 징계나 고발을 위해서 이런 증감법에 따른 환노위의 조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묻지마 자료제출 거부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오늘 오전에도 장관님이 주신 답변이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항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일단 더 사태 파악을 해 보시고 국회로서도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 버렸는데 지금 현재에, 얘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공농성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끝나고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

리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시 한번 질문……

○장하나 위원 전국적으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곳은 유성기업 그다음에 건설노조 그다음에 진흥고속 정도가 지금 주요한 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하나 위원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마무리 1분만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방금 보고가 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확한 답변은 제가 보고를 받고 아는데 일일 제가 매일 상황 점검을 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가슴이 미어지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가슴이 아픕니다.

○장하나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가슴이 미어지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현장에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노동부가 이러한 심각한 사업장들의 문제에 사실 노동부의 어떤 자취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국감기간이라 못 가 보고 11월 18일에 처음 옥천IC 근방에 있는 유성기업 고공농성장에 갔고요.

아시겠지만 용역폭력 청문회 등등으로 작년 국감 때도 이 유성기업의 흉종인 지회장 이하 많은 조합원들이 고통을 토로했고요. 여기에 국회에서, 국회 환노위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 보고자 했으나 다시금 46일째 이 추운 겨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보여 드릴 텐데요, 충남 인권센터에서 이들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울증이나 자살하고 싶다 이런 심각한 외상, 그러니까 트라우마 이런 장애 고위험군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현격히 높은 상황이고요. 현재 노동부는 노동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 할 것을 다 했다 이런 입장이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관님께서 임시 건강검진 조치라도 하셔서 이들이 현장에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지, 작년에 용역폭력 있을 때의 사태에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정말 죽고 싶은지 사태를 파악하다 보면 복수노조 생긴 지 900일이 돼 가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노노 갈등 얘기하지만 저는 노노 차별이라고 보고요. 1노조 2노조 모든 조합원들이 사실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노조에 따른 문제들이 어떤 근본 원인이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라도 임시 건강검진이라도 하셔서 전체 노동자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면밀히 알아보십시오.

가슴 미어지시는 것은 알지만 실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한이 장관님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 이런 갈등이 있는 사업장들은 사실 연초에 저희가 민주노총 방문하고 나서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지적하신 좀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복수노조 체계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번에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 또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정말 장관님과 여기 환노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분들이 더 한겨울이 되기 전에 내려오시게끔 하는 게 정말 기본적인 공직자의 도리고 또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아까 장하나 위원이 맨 처음에 질문했던 녹음파일 문제 그렇게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지금 내용 자체

도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했는지, 죄송합니다.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갑자기 보여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지금, 당혹스러워서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말씀이 있는데 혹시 그 사실관계는 국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어떤 국장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평택지청 관련해서……

○위원장 신계륜 예, 나와 보십시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파일 글썽 저도 지금 봤는데 그 파일과 관련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방관서마다 조금 자료라든가 자료를 생성해서 협조하거나 이런 틀들이 조금 다양해 가지고 그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관서마다.

그래서 파일이 생성됐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도 제가 일선에 있지 않아 가지고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 뭐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장하나 위원이 녹음한 것은 평택에 근무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여기서 의원실에서 질문을 했겠지요. 이 녹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심하시나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

○위원장 신계륜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위원장 신계륜 다음, 최봉홍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7조 1621억 원, 아마 기본 편성 방향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2차 연도 예산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하던 지속적인 사업들이 바뀌어 가지고 여성·고령자 등을 위한 반듯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는데 종전에 1명당 월 40만 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했지만 2013년 4월까지 총 1694개의 신규 일자리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또 269개 기업에서 2118개의 신규 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과거 집행률이 아주 부진했는데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무슨 특수한 대책이 또 있습니까, 예산 증액 외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집행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홍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대로 놔두면 또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증액한 예산이 보람을 못 찾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사업 전달체계라든지 또 실제로 현장에서 수요 파악 그다음에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목적은 좋은데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스스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최봉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근로감독관이나 지청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상황을 살펴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2014년 일자리를 밑 빠진 일자리 사업에 혈세 붓기라는 말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표현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쌓아 놓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계획과 실적 제고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감독관 업무인데 지금 절대 수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난 국감이나 작년 죽 오면서 장관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에서 이런 의무를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근로감독관들인데 금년에 근로감독관 예산 증액이 된 것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오히려 더……

○최봉홍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

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다스리고 있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인데 제가 법안을 내기로 명예감독관이라도 하자 했지만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현장에 화학사고나 무슨 사고나 온갖 일 다 일어나는 것들이 현장 감독관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절대 수가 모자라는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증액 안 해도 되는 대책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단 정원도 정원 문제이지만 일단 충원 자체가 오전에서도 나왔듯이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0% 기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최봉홍 위원** 충원하기 위한 그것을 예산부터 먼저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든지 해야지 이번에 요구한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액 요청 51억 300만 원이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이게 다 그대로 관철됐습니까? 또 증액 요구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것을 좀 강하게 해 가지고 근로감독관들이 산업현장을 전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28페이지 국제협력사업, 이게 OECD 가맹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현재 ILO 기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취업근로자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 항목을 사업명 죽 해 놨는데 이것 말고도 학계나 사회나 일반 업계나 안 그러면 노동계가 해 가지고 우리가 OECD 가입함으로 인해서 외국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좀 발굴해 가지고 이런 데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힘을 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정부가 못 하는 일을 업계나 그

렇지 않으면 학계나 노동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외국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해서 우리가 가 보면 항상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항들도 좀 나중에 서면 질의로 구체적으로 내겠습니다만 이 사업명에 넣어 가지고 숨통을 좀 틔워 주시면 오히려 국격을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몇 개 사업장이 안 되는데, 대강 알아보니 돈도 몇 푼 들지도 않아요. 았는데, 그럴 때 힘이 돼 가지고 오히려 정부가 하기보다 민간 기업이 나서 가지고, 민간단체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전개하면 많은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세한 사항들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네.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까? 정부는 대기업에다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킨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만 실제 CJ나 IBK 기업은행이나 효성ITX나 이런 큰 기업은 자기끼리 해도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일단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서 사실 기업들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최봉홍 위원** 그런데 외국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원해 가지고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나온 것인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마는……

○**최봉홍 위원**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혜택 보는 것은 대기업이 먼저 보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뭔가 전범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대기업이 선도해 주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 작은 데는 말입니다, 중소기업 작은 데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만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요건도 중소기업에 맞는 방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봉홍 위원** 중소기업에서는 8시간 일하는 것을 4시간, 4시간 갈라 가지고 하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보험료만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일자리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최봉홍 위원** 하여튼 좀 연구해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몇 가지를 좀 빨리빨리……

올해 저희 국감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노사발전재단의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과 관련한 것,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현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진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노사 파트너십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노사발전재단 지원으로 통합을 해서 이쪽은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사업은 통합이 안 되고 이것만 또 빠져서,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따로 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다시 보조사업으로, 어차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를 제가 조금 궁금해서, 내년부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이래서 공동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을 한 10억 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것, 지금 클린사업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노동부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자금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과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환경 개선을 산재예방기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가……

이유를 붙이기는 ‘적극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했는데 조금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것인지, 이것도 예산소위에서 어쨌든 적절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위에서 자세하게 차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자세하게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공단 산하에 기술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기술자격검정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되어 있는 것을 그냥 재위탁한다고 시행령만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셔서 사실은 불법으로 이것을 하고 계신데, 기술자격검정원이 2011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 2012년인데요. 2012년, 2013년 2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그 2년 동안에 비정규직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전체 95명 중에 비정규직이 지금 35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자격검정시험과 관련한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다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 1년에 연봉을 18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상태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임원들은 작년 대비 올해 임금을 한 20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연봉 대비해서.

이것은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되면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애초에 기술자격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3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급여 수준이 이렇게 열악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임원들 급여만 올리고, 비정규직은 수당이나 기타 복리후생 전무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깎겠습니다. 이렇게는 국가기술자격검정원 예산을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인력공단에서 하는 방식으로 차라리 다시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기술자격검정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일단 법 인격이 비영리사단법인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정애 위원** 벌어들이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안에서 차별이 너무 많다거나……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자격검정시험 하면서 벌어들인 수수료로 결국은 임원들 급여나 정규직들 급여만 지금 올리고 있고, 정규직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력공단에서 나간 사람들인데 나갈 때 명예퇴직으로 1억 7000만 원씩 다 받아서 나가신 분들이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한번 가고 나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의 아주 허드렛일처럼 이렇게 되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들이 차별 부분하고 불합리한 경영 측면들은 한번 살펴보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씩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 숙제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취업사관학교를 하고 계신데, 민간 위탁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2011년 57명, 2012년 74명, 2013년 10월 현재는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청소년들은 매년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을 중퇴하는 게 아니라 다 중·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2014년에는 노동부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신규로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위기 청소년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위기 청소년이 같이 한 그루핑이 돼서 움직이는 게 주로 도박·알코올 중독자, 성범죄자, 상습 범죄 출소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서 관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잘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관리가 따라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노동부가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아이들을 직업훈련이라도 시키려면 어떻게 지금 실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실 어디에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지금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은 관리가 여가부 정책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틀들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실태 파악도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성인 위기 그룹하고 청소년 위기 그룹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여성부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성부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그게 2010년에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위험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실태 파악한 정도이지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가정에서 밖으로 나온 애들이 어떤 식으

로 지금 그루핑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부는 어쨌든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신경 쓰고 여가부는 상담전화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 상담 정도를 해 주고 하는 수준은 되지만 사실은 애들이 다시 사회인으로 커 나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다른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노동부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을 서영교 위원입니다.

먼저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제도에 관해서 장 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개 시범사업을 3개월 동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6개월 교육과정으로 해서 한 20개소에서 시행할 예정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총 8개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다 한 88% 정도가 수도권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이 사업을 위탁한 업체들도 대부분 다 서울에 있고 또 강의를 진행했던 강사들도 스타 강사들 위주이던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을 함께 배려해서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는 없는지, 올해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지역별 배려, 구체적 사업들은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별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13년 8개의 멘토스쿨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모범사례를 만들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하더라

도 지방에서 올라온 멘티들 문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주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에 20만 원, 지방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적절하게,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경우, 수도권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고스펙 지원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구직자들은 불안감으로 인해서 스펙 쌓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이라는 것은 알맞은 직무역량을 키워서 직무역량으로 평가 받아서 취업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스타 강사 위주나 인기 강의 위주로 흘러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의 내용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수료율을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게 채용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성과를 수료율이 아니라, 청년인재은행입니까? 지금처럼 등록만 시켜 놓는 상태가 아니라 등록을 시키고 난 이후에 취업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꼼꼼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8개 멘토스쿨이 끝나게 되면 올해 240명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들을 봤더니 일단 멘티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탁을 해서 삼고초려해서 모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률도……

○서용교 위원 지금 멘티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후에 팔로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어차피 이게 채용시스템에 관한 제도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어제 저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에 다녀와 봤는데, 먼저 적합

한 업무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업무 분할, 업무 개발 모델요?

○서용교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거기에 나온 직무들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 봤더니 한 150개 정도 직무가 됩니다. 직무 개발은 기업에서 했는데요. 각 기업들이 연구를 해서 개발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사무 관리도 있고 또 전문직들도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법률, 통·번역 서비스도 있고요. 또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직종에…… 어쨌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서용교 위원 대부분 다 기업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콜센터라든지 판매직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정규직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준을 좀 높여 주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모델 개발을 말씀드린 것은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지금 각종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실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위주라든지 또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 각 업종별에 맞는 또는 기업별 사정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로문화를 바꾸는 큰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어제 참여한 10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직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낸 반면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전환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한 10억인가 15억인

가 이것밖에 편성이 안 돼 있던데, 제가 보기에 는 모델 개발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미의 모델들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예산을 배정하고 노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흔히 지금 비정규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제 일자리로 단순히 전환하는 실적용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모델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동부에서 노력해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국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직무 분석하고 모델 개발은 지금 연구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늘려서 홍보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모델 개발비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모델들도 정형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취업 컨설팅 분야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인사나 노무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하고 긴밀하게 연관돼서 진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 아닙니까? 이때 모델 개발을 하는 데 좀 의미 있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일단 대기업에서 실제로 만들어낸 시간선택제 일자리들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미리 보고 또 모델 개발도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전범들을 만들면 그것이 중소기업에 도입될 수 있는 확산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모델 개발 쪽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과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라 그런 뜻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 첫 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입니다.

아마 여야 위원님들께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2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심상정 위원** 죽음의 공장이지요, 그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그동안에……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 때리기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 문제, 또 앞으로도 계속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상태로라면. 그러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용노동부에서 책임 있게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앞에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제철 전 사업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현대제철 중심으로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파악, 그동안에 감독을 여러 차례 해서 했습니다마는 파악되지 못한 것들도 이번에 또 면밀히 해서 강도 높은 어쨌건 안전조치들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업도 일차적 책임이 있고 노동부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우리 국가가 또 책임져야 될 일도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현대그린파워가 현대제철이 책임지는 것이냐 그린파워가 책임지는 것이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논란 자체가 저는 대단히 무

책임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피해자는 있고, 죽은 사람은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귀결되니까 이게 계속 재발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한국내화라고 아르곤 사고, 질식사고 있을 때도 현대제철 지분 있는 회사가 아니지요. 그것 도급 회사인데,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대제철 내에서 현대제철 생산공정에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고 또 현대제철이 현대그린파워에는 실제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고 공시까지 돼 있는 데인데, 실질적인 경영 개입과 책임을 현대제철이 져야지요. 그런 책임하에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상황을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중부발전도 여기에 지분을 한 24%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25명 정도가 파견이 돼서 지금 기술적 측면에서 발전소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같이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 5월 달에 이미 특별감독에서 ‘부생가스 배관 내부 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수립돼 있지 않다. 환기 시스템 구축이나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질식사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물론 현대그린파워는 아니지요. 그때 3고로에서 같은 부생가스 배관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현대그린파워는 다른 기업이라고 조사도 안 했어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니까 여기 건드리면 여기서 사고 나고 여기 건드리면 저기서 사고 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가 특별감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가면 그다음에 눈 가린 데서 또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고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게 저는 아주 심각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도 제안드리

고 싶은 것은, 일단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아주 책임자가 구속수사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환노위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하고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법—여야에서 다 내놓았습니다—이것 빨리 처리가 돼서 법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현대제철이 세우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청문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 공청회를 우리 환노위에서 열어야 된다고 봐요. 기왕에 현대제철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했고 또 노동부에서도 감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확실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철도민영화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한쪽에서는 민영화라고 하고 또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민영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1년도 안 돼서 약속을 다 안 지키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도 심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업까지 돌입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또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ILO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서 ILO가 지금 예고된 철도파업에 대해서 유례없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우려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왜 이렇게 유례가 없는 이런 우려를 사전에 표명했다고 생각합니까, 장관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ILO가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심상정 위원** 그것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쓰겠습니다.

아니, ILO가 우리나라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데, ILO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으면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보고 ILO 우려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2009년 11월에도 철도가 장기파업에 돌입했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며칠 전에 가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을 노조가 파업하는 것,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신 다음에 무자비한 폭거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1만 1000명이 넘는 사상 최대의 징계자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ILO에서 이번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 정부 탄압을 우려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철도민영화 문제이고 또 대통령께서 이미 사회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이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파업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철도민영화 부분은 어떤 노사관계……

○**위원장 신계륜** 잠깐만…… 노사정 위원장님, 잠깐만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사관계 이전에 지금 국토교통부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부처 간의 의견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ILO의 우려를 이제……

○**심상정 위원** 아니, 지금 국토부에 이야기하셔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변칙적인 방법으로 밀고 가고, 13일 날 수서발 KTX 분리 문제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파업 일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심상정 위원** 그런 점에서 최소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절차라도 약속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견해를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관련해서 어떤 논의 기회나 자리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아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님은 오셨으니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예.

○**위원장 신계륜** 이번에 예산, 노사정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과제, 또 사회적 타협 이런 게 필요한 굵직한 일들이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적절히 돼 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지금 현재 거의 지난해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체로 정부에서 10% 정도를 감액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는 법률 개정안이 지금 환노위에서 발의가 돼 있고요, 여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 수가 지금 현재 거의 10명에서 2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회의체가 돌아가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업종별 회의체가 2개 정도 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는 가동이 되면 그냥 한 주, 주당 회의 수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거의 매일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되는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

어서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좀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란 대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니, 어느 해보다도 대이슈, 그리고 큰 이슈들, 아주 굵직한 역사적, 난마처럼 얽힌 것을 정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장관님, 예산을 좀 올려 주시지 왜 10% 줄였습니다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장님 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아니,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줄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정부 전반적으로 지금 줄이는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4.5% 정도 증액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혹시 노사정위원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중요한 과제가 많고 또 이게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것은 해결 못 하더라도 국민 앞에 드러내서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임금체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노사정위원장님께서 팔 좀 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오늘 사정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렇게 첫 번째 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 반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안 하시나요?

○**위원장 신계륜** 지금 안 나오셔서, 김상민 위원님.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준고령층을 위한 그 사업을 확대한 것이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관리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국감에서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마저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민간기관의 회계 관리나 운영 전반을 중앙에서 바로 모니터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국감 때도 한번 대안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사실은 지금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시스템 구축에다가 투자를 하면 민간서비스 질 향상도 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업무가 좀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향상과 이것의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체계적 관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누수 방지하고 중복 방지 또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43억 예산으로 내년 8월까지 차세대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전산망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민간위탁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들은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 저희가 관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관리 가능성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전달 체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고용노동부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없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 국감 때는 이 취업패키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K-Move 같은 경우도 지금 전산망 구축 거기에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K-Move도 약 40억 정도 해서 새롭게 전산망을 만든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워크넷 같은 데다가 일부 좀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K-Move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고용노동부에서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저는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어학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IT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그런 소위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한 것이 이게 K-Move처럼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 저는 이것 아주 잘못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냥 워크넷 같은 데다가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다’라고만 공고를 해도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무슨 멘토단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이렇게 40억이나 들여서 전산시스템부터 하는…… 저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그냥 이게 타성에 젖어서 매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업의 이름만 바꾸고 말이지요,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바뀌어서, 특히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무슨 영어이름으로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관련해서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K-Move 포털사업에 관련해서는 연초에 심도 있는 논의들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크넷에 못 둘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실제로 주 이용층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 사업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설계 혹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있는데, 월드잡이라는 해외 취업을 위한 사이트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이제 개편을 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을 잘 고쳐서 쓰든가 해야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글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을 이제.....

○홍영표 위원 멀쩡한 돈을 40억씩 갖다가 투자하느냐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월드잡 사이트를 이제 고도화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해서.....

○홍영표 위원 그럼 K-Move는 따로 만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홍영표 위원 그럼 월드잡 속에 집어넣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월드잡을 이제 다시 완전히 개편, 업그레이드.....

○홍영표 위원 그게 K-Move 사이트로 새로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무튼 저는 K-Move 사업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소위를 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까마는, 실제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환경이. 하나는 해외의 일자리,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갈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런 일자리가 있긴만 하면 그걸 워크넷이든 어디 월드잡 사이트든 아무데나 올려놔도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이 거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잘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년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은 게, 아마 숫자상의 실적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MBC 같은 데서도 해외 일자리 탐방단의 성공사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방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사례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끼와 열정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할 말 좀 더 하세요.

○홍영표 위원 아니, 지금 MBC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고용노동부에서 돈 쥐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실적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적.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본 같은 데 어디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가서 청소하는 거나 시키고 말이지요, 피지에 가서 한 달에 20불 받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 게 이 사업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

지 실적을 말해야지, 매년 예산 늘려 가면서 좀 더 기다려 봐라, 뭐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이었다면 저희도 안 했을 겁니다.

○**홍영표 위원**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적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홍영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장관님, 작업환경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때까지 죽 해 왔고 그런데, 대부분 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고위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위험업종으로 정하는 기준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준 관련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산재 예방보상국장입니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고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유해·위험기구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 위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위험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고위험.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화학 물질이라든지 위험기계·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주로 고위험업종이라고……

○**서용교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따로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현재 작업환경 실태조사 예산이 45억으로 전체 편성되어 있던데, 그 대상이 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해자 비중은 지금 전체 우리 산업계에서 한 3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조업체가 작업환경 실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사고가 났지만 비교적 중소기업 사업장,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비교적 사고 재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업종별로 분류해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을 보면 2010년도에 88%, 2011년도에 82.4%, 2012년도에 81%, 재해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들이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하는 주요 목적은 결국 재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물론 사업장이 많아지고 행정업무를 지금 우리 행정력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고 행정력의 소진이 오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을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중심을 옮겨 가는 게 안 맞나 싶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제조업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또 왜 제조업만 하면 안 되냐면, 지금 우리 작업환경들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현대적인 재해 또는 직업병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특히 IT업종이라든지, 뭐라 합니까? 작업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질병뿐만 아니라 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제조업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장 규모별로 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종에 저희들도 지금 과도 새로 만들고 해 가지고 직업성 질병들 예방 또 특별히 감정노동 관련된 것들도 지금 많이 직업, 정신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책에 면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그리고 근로자건강센터에 관한 질문이 좀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설치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 10개소가 서 있고 내년에 5개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첫 번째, 이것도 대부분 다 수도권이 많습니다. 의료시설이 비교적, 또는 의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지방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2016년도 25개소를 해서 2020년도까지 총 48개소까지입니까? 확장할 계획으로 있던데 이 계획을 조금 빨리 당겨 줄 수 없는지, 1개소에 8.1억 정도밖에 건설비용이 드는 것 같지 않던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18년까지 35개소입니다. 말씀하신 40개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늘려 가야 되는데, 장소만 늘려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 가장 필요한 게 전문의들이거든요. 건강·의학 전문의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 같은 것들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 어쨌건 환노위원님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노동부가 여러 가지 존재이유도 있고 또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의 노동자의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들에서 노동부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빨리 진척을 시키는 것이 여러 모로 노동부

를 위해서나 또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제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관련해서 원격훈련 부정수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이 전체 한 68만 명 더 예산이 돼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서용교 위원 그런데 부정수급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노동부에서 원격훈련 부정수급 방지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사전·사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하셨던데, 문제는 이야기되어진 것처럼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 예산이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원금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게 비중이 높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왜 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게 아마 실시간 감독하게 되면 기술이라든지 인프라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 유사한 시스템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서용교 위원 그거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는……

○서용교 위원 아마 유사한 시스템을 지금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하고 지금 현재 직업 원격훈련하고는 같이 그냥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어쨌건 향후 검토해서 검토가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도 이게 큰 비용이 안 들고 가능하면 행정관리상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노동인권교육 문제하고, 시간이 되면 시간제 일자리 문제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해 65만여 명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갈 텐데요, 이미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에도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부 언급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 계획된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3600만 원, 올해하고 똑같았습니다. 연구용역 1개 비용 정도 되지요. 고용부 연구용역이 보통 3000만 원~5000만 원, 뭐 그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1개 비용으로 인권교육 예산이 책정돼 있는 반면 기업가정신교육이 26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아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노동인권 예산의 100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기업가정신교육 필요합니다. 요즘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권 무시하고 기업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가정신 없어지고 그냥 돈에만 의존해서 쉽게 사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확보되어야만…… 사실은 그 권리 위에서 기업을 하려다 보니 기업가정신도 더 함양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어쨌든 간에 노동부가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저는 지금 아예 예산 산출내역 뽑아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에 제안할 겁니다. 22억 증액을 요구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노동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예산으로 내놓으신 연구용역비 1개 비용 정도 예산 36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답변은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다행히도 이번에 수능시험에서 근로기준 관련 시험이 하나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소요예산은 한 2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온라인교육 시스템에 약 13억 원 그리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에 9억 원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비용들, 한 22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은수미 위원**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배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뭐……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리고 저는 적어도 박근혜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말씀했기 때문에, 일자리의 권리를 말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도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약 파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용박람회가 얼마나 북적북적했는지, 이런 일자리라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논평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북적북적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시간제 일자리는 시대 흐름에 맞는 일자리다’, 뭐 시대 흐름을 만들어 보시겠노라라는 긍정적인 발언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그러면 시대 흐름 좀 만들어 보는 예산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현재 시간제가 그대로 둔 149만 명이고 제 추정치로 본 박근혜정부 말기 정도 되면 180만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시간제 일자리 시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시간제 일자리가 아시겠지만 현재 시급이 7000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정규직 대비 시급이…… 시급은 같아야 되잖아요. 평균이 그

령습니다. 평균이 한 50~60% 정도 된다는 것
아실 거고, 그래도 월평균 급여가 60만 원이에요.
이게 정부가 생각하시는 시간제공무원 기본급하
고 똑같더라고요, 58만 원.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가 12.2%,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14.6%,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한 15%,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좋
은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것 좋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기존의 생태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시킬 수 있는 아무런 예산이 없
어요. 왜 예산에 그러면 기존의…… 앞으로 거의
200만에 육박할 이런 나쁜 허드레 시간제 일자리
를 시대 흐름에 맞는 일자리로 바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치시지 않도록 바꿀 수 있
는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
까? 예산안 내셔야지요, 왜 안 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
도로 사업예산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 그
다음에 근로조건 개선사업 또 저희들이 지금 추
진하고 있는 기초고용질서 강화사업 이런 데 전
부 관련된 예산들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게 지금 시간제 일자리 예산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시간제 일자리 예산은
아니지만……

○은수미 위원 아닌데…… 지금 제가 있느냐,
얼마를 제출할 거고 얼마라고 예상하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
까. 저희 의원실에 그 흩어져 있다는 예산 중에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선시키는 해당 예산이
어떤 항목인지 보고하세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은수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
할 건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따로 분리가 가능한지
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은수미 위원 분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것은 청와대에도 질
의를 했습니다만 영리활동 겸직 허용, 이것 입장에
변경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생계형 자구책으로 영리활동 허용하겠
노라, 이것은 정부 입장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겸직 허용인데요, 영
리활동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
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수미 위원 그러면 겸직이 영리활동 아닌 비
영리활동입니까? 이것은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겸직이라고 했는데 비영리활동입니까, 영리활동
입니까? 영리활동 포함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기가 말은 공직과
이해가 위배되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위배고 뭐고 돈을 버는 일
자리를 겸직을 허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은수미 위원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검토 중이라고 보
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은수미 위원 그러면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저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생계형 자구책으로 시간선택제 공무
원에게 영리형 겸직을 허용하겠노라라는 결정에
입각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제출하시면 저
이것 통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설득하십시오. 대국민에게 설득하세요. 공무원에
게 다른 주머니 챙기게 하겠다, 그것 분명히 하
십시오.

저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원래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제한적 허
용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해지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종훈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51억 4500만 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요조사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에 위한 시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컨대 화상회의시설이 대기업은 회의실마다 다 돼 있는데 중소기업은 업무도 못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설이 센터가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에 위한 것이어야만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어디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가, 전문위원이 말한 수요조사의 의미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스마트워크를 강조하시면 정부는 항상 이런 것 할 때 센터부터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건물 짓고 센터 짓고 이래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워크가 대기업에서 되는 이유는 VPN—가상통신망이라고 하지요—이나 NAC—네트워크 접근제어라고 합니다—이런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나 외부에서도 회사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스마트워크가 되는 건데 센터에 가서만 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센터 가면 뭐합니까? 화상회의 같은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망이 연결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회의 때문만 반드시 회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대면회의 때문에만 회사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 컴퓨터에 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 설치 지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지요, 현재로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 부분은 성공모델, 일차적으로 전범을 세우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단독으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중소기업·대기업 공동 설치 모델하고 사업주단체 컨소시엄으로 중소기업도 개별적으로……

○**이종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첫 번째 하드웨어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중소기업 하나로 지원하시는 건 어려울 거고 공단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집적돼 있는 부분에서 하셔야 될 건데, 제 말은 소프트웨어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세종시 가시잖아요. 공무원들의 연간 출장비가 1300억이 라는데 스마트워크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서는 공무원들은 거리에다가 돈 뿌리고 다니고 이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하고 의논해서 가지고 이 부분도 계획을 새로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현재로는 42개 사업이고요, 연말까지 계산을 해도 13개 사업은 50% 집행실적률을 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영업자 지원사업만 3개예요, 13개 중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실업급여, 전직 지원, 다 50% 미만이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3대 사업을 자영업자들에게 해 보는 거예요. 맞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낮으면 이것을 ‘예산금액을 조정하라’, 국회에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영업자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렵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들 사각지대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임의제도로 했는데 가입을 임의제도로 하긴 했지만 요율 자체를 2.0% 정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데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현실적인 실태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행된 것이 있어서……

○이종훈 위원 차관님, 이런 자영업자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한 것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금년에 몇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거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으면 아는 사람 얘기해 봐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이재흥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연구조사를 한 것을 자세히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지만 아마도 지금 시점까지 장관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결산과 또 이번 예산과 겹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계층 숫자는 우리 대상으로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현재 가입자로 봐서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이냐 고민할 겁니다.

○이종훈 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예산을 내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용자사업이 3개 있습니다. 그 3개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가 8.7%로 제일 낮고,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 능력개발시설장비 용자 이것도 30%대인데 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는 노동부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1조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더니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면 많은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달량 8.7%, 이거 왜 이렇게 낮고, 체불임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도 상당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살펴봤더니 기존에 사업주 체불임금 선지급 조건이 5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 선지급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훈 위원 8월에 50% 선지급 요건 삭제한 것은 아는데, 하고 나서 확 늘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업이 망할 때까지, 완전 폐업할 때까지 기다리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실제적인 보호가 늦어져서 거래처 납품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도 요건으로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실질적인 개선들을 했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것도 나중에 담당자가 와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중단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춘천의 진흥고속이라는 버스노조이고요. 오늘 56일차 고공농성 중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49일차, 세 분이 올라가서 농성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잘 아실 겁니다, 유성기업은 장관님이 그나마 세 사업장 중에서 내용 제일 잘 아실 텐데 여기는 오늘로 46일차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내년엔 이런 복수노조 사업장 창구단일화 시행 3년 맞아서 연구용역도 하시고,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년에는 실태조사도 하시겠다는 계획을 제가 국정감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고요.

화면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건강상태가 있다고 하고 이 화면을 못 보여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하면 충남인권센터가 아산

시의 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전문적인 건강실태조사는 못 됩니다, 설문조사 형식에 가까운 이런 조사였기 때문에.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도 눈여겨보아 주실 것은 유성 아산, 노란계, 2012년에는 아시다시피 용역폭력이 동원돼서 엄청난 대규모 유혈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48%, 현재는 그때보다 나아져서 28%인데 유성 영동이 38%로 아주 현재 높습니다. 지금 철탑 위에는 아산지회장, 영동지회장, 이렇게 두 분이 올라가 계시고요. 저런 이유가 뭔지 저도 100% 이게 확실하다고 주장은 못 드리지만 직접 가서 만난 많은 노동자들이 토로합니다.

언론에서라든가 아니면 노동부도 ‘노노갈등’이라는 말을 너무 쓰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왜 노동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반목하게 되었느냐…… 이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이후에 사실상 복수노조라는 제도를 사측이 또 누군가 악용을 해서 노노갈등을 조장을 했고 만약에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등 노동부가 나서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을 했다면 저 제도가 문제가 없는데 노동부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사측이 이런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잡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벌어진 노노갈등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특히 1노조가 2노조를 협박하고 왜 다른 노조를 선택했느냐고 겁을 주고 이런 것들만 언론에 나오는데 억울해 죽겠다든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괴롭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마지막 선택할 게 없어서 자다가도 죽는 꿈을 꾸고 이런다는 얘기를 한두 분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너무 많이들 하세요. 이게 2, 3년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가정이 파탄 납니다. 이혼하신 분들도 부지기수고 가족들도 계속 이렇게 쟁의행위를 하시고…… 철탑에 이번에 홍종인·유성지 회장님은 두 번째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족들도 너무 힘들지요,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저는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재판부의 결과를 보시기 이전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내년에 연구용역 실태조사 계획 잡으신 것도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가장 불거져 있는 데들은 당장 하실 수 있는 조

치가 뭔지 좀, 정말 행동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임시건강검진 같은 것을 실시해서라도 저런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질환 상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린 건데요. 그 외에도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겠습니까? 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간단히 알려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현재 상태에서 말씀하신 사업장들,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들 제기해 주신 것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임시 건강진단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면 너무 사태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일본의 경우가 이런 복수노조 시행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악용당하면서,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조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노조끼리, 노동자 간에 암살자를 고용해서 서로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만의 야쿠자라든지 이런 문화가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 서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장관님께서 오늘 많이 숙지하고 가 주시고 이게 한두 사업장, 특이한 사업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직접 만나 봤더니 정말 심각하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바를 계속 눈여겨 지켜보시고 저도 도울 게 있다면 장관님 하시는 일에 정말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스마트워크센터라든가 K-Move,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얘기들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청년창직인턴제 저는 이것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tvN이라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아 내고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에도 우리 노동부가 같이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이 프로그램 제작, 내용 다? 들어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후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합니다.

○장하나 위원 드림헌터는 제작비를 내는 거고, 이것은 후원만 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하고 후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것은 옆에 차관님 나와 계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추경예산 심사 때는 또 차관님께서 소회의실에서 같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여쭙어 보는 건데요.

당시에 창직인턴제 사업의 문제점을 노동부도 또 차관님도 인정을 하신 바가 있어요. 4월 30일에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증액이 전액 삭감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창직인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간 200만 원을 벌면 창직에 성공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었지요.

어떤 청년이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새로운 직종을 개발을 해서 1년 동안 단 200만 원, 월이 아닙니다. 1년에 200 수익을 했을 때 창직 성공했고 또 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청년 취업률로 다 홍보를 할 것이고, 성공 사례로 홍보를 할 것이라는 게 얼마나 기만적이고 참 많은 청년들의 공분을 살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때 지적된 사항을 단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예산을 다시 또 증액해서 내놓았던 것 정말 실망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공보수를 지원한 일자리가…… 그래서 1년 동안 200만 원 번 것은 좋은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망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라고만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알겠습니다.

청년창직인턴제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창업하

고도 영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를 해서 내년 시행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새누리당 주영순입니다.

장관님,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과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지금 몇 곳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33곳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지난 2004년도에 서울 구로구에 최초의 거점센터인 한국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 후로 2007년에 의정부센터, 2008년에 김해와 창원센터 그리고 2010년에 인천과 대구·천안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는 그렇게 해서 전국에 약 7개가 지금 설립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현재 광주·전라도지역, 호남지역에는 거점센터가 하나도 없고 4개 소지역센터만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소지역센터가 광주에 두 곳, 전남 여수와 영암에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호남지역에는 센터가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마 지역적으로 확대를 하는 중간에 스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호남지역은 실제로 네 군데의 소지역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파악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지난 광주지방노동청 국감에서 본 위원이 광주·전라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이 심각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에

대한 활용실적도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특히 호남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6600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만 6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광주·전라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신고 사건이 588건에 달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임금체불,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조선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목포지역은 광주지역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다소 적지만 광주지역보다 오히려 사고 건수가 100여 건이나 많은 체불임금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는 거점센터는 고사하고 소지역센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다 목포 무안신도시 지역으로 왔는데 최소한 호남지역에, 도청소재지에 우선적으로 거점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위원님 문제 제기는 알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4개 소지역센터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점센터가 일곱 곳이 보니까 지역적으로 호남 쪽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어쨌건 이것은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라든지 또 예산 부분도 추가 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예산 부분보다도 아까 6600개 사업장에 1만 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성실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이 되도록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체불임금 사건이 전국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특히 도청소재지에 조그마한 지소도 없이 그렇게, 소지역센터 이것도 없는 지역이 지금 호남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도청소재지에다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그 지역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227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사업과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인건비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지원액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건비 지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대상자는 몇 명이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5030명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朱永順 委員 지원 상한액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해 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시간제 일자리 컨설팅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사후관리도 아주 엉망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홍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정감사가 그러면 필요가 없지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사후관리도 엉망이지만 아주 실적도 저조하고 돈만 갖다 전부, 혈세만 갖다 이렇게 낭비하기에 이것 정말 좀 개선을 해라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7억 원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이 한번 다시 체크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표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심상정입니다.

우선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아빠의 달’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8월에 민현주 의원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달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반영된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14년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빠의 달……

○**심상정 위원**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뭐가 반영이 됐습니까, 도대체? 본인은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빠의 달을 도입……

○**심상정 위원** 아빠의 달을 도입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는 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공약대로 제도설계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한 3800억 정도……

○**심상정 위원** 3800억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한 해에.

○**심상정 위원** 한 해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리고 14~17년까지는 약 1조 8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끌어다 쓰니까, 재정을? 고용보험기금 고갈됐고 어디에서 쓰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이 부분을 실업급여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재정 자체가, 적립률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아빠의 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또 언제 추진할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부처간에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언론에 보도된 노동부 관계자 얘기는 ‘세계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 달이나 의무화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선심성 공약도 아니고, 이런 것을 놔두고 공약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지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언제할지도 모르고, 제가 이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 공약이

100% 다 이행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약을 했으면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여차여차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북적거리는 박람회 때문에 몇몇 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화를 많이 했어요. 가 보니까 ‘나이가 많다,’ ‘대학 졸업 이상은 곤란하다’, 계약직은 ‘재계약은 모르겠다’, ‘면접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게 채용박람회가 아니고 채용 박탈감만 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게 경력단절 여성 문제인데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가 될지 정부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30대에 일 포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일자리에 떨어지 나가니까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처방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경력 단절자를 시장으로 유입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예요. 그냥 대통령이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 이야기하니까 그저 그냥 숫자 채우고 성과 내는 데 급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동시장, 결혼해 가지고 애 낳고 애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쫓겨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이게 우선적으로 제출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 여성을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요. 일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 또 육아휴직 또 임신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또 지금 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상향 이런 제도개선들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 육아휴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성들 육아휴직을 늘려야지요, 당연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지원금도 있어서……

○**심상정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별로 색다른 준비된 내용이 아니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안을 만드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력단절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삼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도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그룹 측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홍보실 관계자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고소 고발인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홍보실 관계자부터 소환한 이유가 뭐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 가지고 또 소극적인 수사나 증거 인멸할 시간을 삼성에 줬든지, 이런 말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장관님?

피고소 고발인 언제 조사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

○**심상정 위원** 파악을 좀 하셔서 피고소 고발인, 지금 11월, 12월 두 달, 12월까지 두 달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다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 피고소 고발인 조사도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관련 추진사항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해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난 12월 14일 삼성SDI 출신 해고자 이만신 씨가 울산지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만신 씨가 무죄판결을 받는 데 삼성 문건, 제가 공개했던 삼성 문건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삼성 측이 이만신 씨에 대해서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판결문을 한번 노동부에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삼성의 무노조 전략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노사협의회 위원장 출신은 10억 원 정도를 받고 퇴직한다’ 이런 내용, 소문만 떠돌았는데 이번 판결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용노조,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와 있고요.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소 고발인 조사를 언제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표**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공히 그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아마 노동부 내에서도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노동부가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결정문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 제74조에 부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이 부분을, 이런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법원 판정을 존중합니다.

○**김경협 위원** 예.

문제는 국회에서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6만 명 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습니다. 노조였다가 아니었다가 노조였다가……

이게 지금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집행정지 결정은 잘 아시는 대로 본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협 위원** 그것은 이제 다 아는 사항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본안소송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들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문제는 계속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안 됐는데 문제가 이렇게 새로 생겼으면, 생긴 문제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이것을 강행을 해서 발생한 문제하고, 교육청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하고 전임자 복귀 예고하고 이런 혼란들을 초래를 한 겁니다. 노조였다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행정 혼란을.

이게 국민 대통합하고 부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 달 간 노조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행정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 왔는데 장관님, 이런 행정 혼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행정 혼란 이전에 정부에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게 되는 그간의 과정들하고 그 이유는 이미……

○**김경협 위원** 그건 알고요, 그건 수차례 들었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의 책임은 없느냐 이런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우려는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본안소송이 진행이 되면 거기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어떻

게 하시겠냐’, 어떻게 책임질 건지 제가 여쭙어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나왔는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혼란을 계속 정부가 자초를 해 놓고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가 봐야 압니다’, 이렇게 계속 가실 겁니까? 이게 책임 있는 정부의 노동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최소한 문제가 이렇게 틀어져서 혼란을 초래했고 발생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집행정지 인 용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단지 법원이 판결을 했다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나 정부가 그런 혼란을……

○**김경협 위원** 이 과정에서 계속해 가지고 해 왔던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우려했고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 취업 문제, K-Move, 시간제 일자리, 전교조 문제, 참 많이 지적을 해도 노동부는 전혀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소귀에 경 읽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귀를 정말로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알아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 너네 떠들어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한다’……

예산은 점점 확대하고 사업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한 예산안들이 주로 다 그렇습니다. 오늘 몇 차례 여러 분들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입니까, 이것? 국회를 상대로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겁니까? 마음대로 떠들어 봐라 이런 건가요?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됩니까? 사업은 더 늘리고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 관련해서 다 유념할 사항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고쳐

야 될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복합지원 공간, 개념도 애매한데 조그맣게 해 가지고 5억씩 해서 3개소 이렇게 해서 또 예산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 없을 것이다, 일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규모가 평수가 700평 이상에, 예산액수가 47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이런 지원 공간,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겨우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멍가게 수준의 사회적기업 지원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만 낭비고요, 실제로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노동부가 현재 창업보육, 사회적기업의 창업보육에 대한 전혀 감이 없습니다, 감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만 하고 창업보육 문제를,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아예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의 일자리 고용률 70%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의 핵심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정작 해야 될 일에 사업과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문제, 이미 실패한 사업, 계속 제기하는데 그것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복합공간이나 아니면 클러스터나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자체하고의 협업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고무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경남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공간 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기존의 시설을 인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를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창업보육지원센터 조성 부분은 기존 시설들 또…… 새로 부지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부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고용률 70% 대책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안에 그거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선 오늘 긴급현안 문제로 현대제철에 대한 청문회 혹은 현장조사를 비롯한 환노위 차원의 대책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워크,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 멘토스쿨, K-Move, 헬프데스크, 듀얼시스템, 인센티브 및 인프라, BTL, HRD, 워크투게더……

저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장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앞으로……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한글학회 같은 데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무튼 장관님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기관

장님 그리고 공직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은 사실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예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소위원회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이완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종훈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홍영표 위원 이렇게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관	방 하 남
차 관	정 현 옥
기 획 조 정 실 장	심 경 우
고 용 정 책 실 장	이 재 홍
노 동 정 책 실 장	권 영 순
인력수급정책국장	신 기 창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종 길
노동시장정책관	임 서 정
직업능력정책관	나 영 돈
고용서비스정책관	황 보 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 수 영
근로개선정책관	임 무 송
노사협력정책관	박 화 진
공공노사정책관	송 문 현
정 책 기 획 관	김 재 훈
국 제 협 력 관	최 기 동
대 변 인	박 성 희
감 사 관	조 철 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 장	김 대 환
중 앙 노 동 위 원 장	박 길 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 재 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 영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 헌 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 성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정 철 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 윤 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 재 구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 종 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 기 권
한국잡월드이사장	장 의 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 진 규

○출석 위원(15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룬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	-------